

근 대

1. 광복. 대한민국 건국

한국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였다. 광복은 일제가 기도했던 기나긴 민족말살의 폭압을 물리치고 국가와 주권을 되찾은 뜻 깊은 의미를 지닌다. 물론 광복이란 대외적으로 연합국의 승전에 따라 이루어진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직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8년 정부 수립의 시기까지 제1공화국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을 정도로 여러 독립단체와 독립군을 통합하여 새로운 독립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1940년에는 광복군光復軍을 창설하여 1941년 정식으로 대일선전포고를 한 후 국내정진군國內挺進軍을 조직하고, 1945년 9월을 기해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하려는 준비와 훈련이 완료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광복이란 단순히 미·소 승전에 따른 부산물이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끊임없이 전개한 항일독립전쟁에서 달성되었던 것으로 적극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광복이란 기나긴 독립투쟁을 통해 나라를 되찾은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한마당이었다. 그러나 광복이란 단순히 주권을 회복한 기쁨에 앞서 한국인 스스로의 반성을 요구했던 의미가 있었다. 한국의 5천년 역사는 세계인류사에서 집권적 통합의 경험이 가장 풍부하고, 각 시기마다 시련과 위기들을 강인하게 극복해 왔던 역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광복이란 근대시기에 이르러 한국사회의 근대적 지향과 독립을 이끌어내지 못한채 왜 일제日帝의 식민지로 전락되었고, 광복 이후 줄곧 분단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자성自省과 성찰을 통해 이해할 때 그 의미가 깊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재적 관점에서의 ‘자기반성의 역사’란 광복의 의미를 너무 치켜세우거나 깎아내리는 역사가 아니라 역사적 성찰을 통해 한국의 미래상을 구현해야 한다는 의지로 새롭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광복은 다른 한편으로 일제 식민구조를 청산하여 민족 정통성을 확립하고, 민족통합 수립의 막중한 시대적 과제를 부여해 주었다. 이러한 과제 수행은 조선총독부로부터 행정권 인수요청을 받은 여운형呂運亨(1886~1947) 등을 중심으로 민족계열과 온건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참여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朝鮮建國準備委員會가 결성되어 이루어졌다. 당시 ‘건준’은 국내 최초의 정치단체로서 민주주의적 독립국가의 수립을 준비하는 전민족적 통일체임을 표방하고, 전국 145개의 지부를 설립하여 일정한 대중 기반을 바탕으로 ‘완전한 독립’과 ‘대중생활의 확보’를 내걸고 민족국가 수립을 위한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다. 영광의 건준지부는 8월 17일에 조희총曹喜忠을 위원장으로 추대하여 전남도지부 산하에 조직되었다. 당시 건준 인사들은 대부분 1910년 이후 민족교육운동을 전개하고, 광복을 맞을 때까지 3·1운동을 비롯하여 각 분야의 사회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이었다. 광복공간에서 건국에 목표를 둔 조직체였으므로 개인의 이념에 관계없이 독립항쟁을 주도한 다양한 명망가들이 군민의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의 건준 지부는 대부분 독자적으로 결성되어 중앙과 상하관계를 이룬 조직체는 아니었으나 중앙과 마찬가지로 치안유지와 함께 일본인의 적산을 관리 보호하는 일 등을 담당하였다.

건준은 민족·사회주의 계열에 관계없이 독립항쟁에 헌신한 명망가들로 구성된 통일전선적 성격을 지닌 조직체였다. 영광의 건준도 숫자상 사회주의계열이 다소 우세했었으나 위원장 조희총을 비롯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은 적산관리부장 정육, 영광체육단사건의 문교부장 이을호 등은 민족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었다. 그러나 9월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건준의 조직과 활동, 궁극적으로 국가건설을 둘러싸고 이념노선상의 첨예한 이견과 대립이 노정되어 갔다. 일제강점기 독립항쟁의 노선이 민족·사회주의 계열로 분화되었고, 현실적으로 한국의 독립이 강대국의 이해에 따라 ‘적당한 시기’

로 유보되는 가운데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冷戰 속에서 3·8선 획정의 남북분단南北分斷 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노선상의 대립은 남한의 경우, 미군이 진주하기 전에 국민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치세력으로 인정받아 국가 수립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것과 맞물려 있었다. 따라서 건준은 점차 민족계열 우익이 이탈하면서 사회·공산계열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9월 6일경에 ‘조선인민공화국朝鮮人民共和國 임시조직법안’이 통과된 후 전국 건준의 조직은 20여일 만에 와해되고, 7도 12시 131군에 걸쳐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인민위원회는 표면상 국내외 좌우익세력을 총망라하고, 아직 귀국하지 않은 이승만을 주석으로 추대했으나 사실상 민족계열을 배제한 채 기선 제압에만 급급하여 광범위한 정치세력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인민위원회는 공산계열의 내부사정과도 관련하여 정치적 구심점을 결여한 채 공산국가의 수립에만 당장의 목표가 있어 커다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9월 14일에는 박헌영朴憲永의 조선공산당이 재결성되는 정세 속에서 16일에는 송진우·김성수를 비롯한 민족 우파계열은 건준을 공산세력으로 규정하여 참여를 거부하고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를 제창하면서 한국민주당韓民主黨을 결성하게 된다. 이후 민족계열의 정치세력은 잠정적으로 독립촉성중앙협의회獨立促成中央協議會에 통합되어 갔으며, 역시 공산계열은 이념 목표에 따라 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정치구도는 민족통일전선의 성격을 지닌 건준에서 이념 성향에 따른 정치세력의 분열을 뜻하는 것으로 광복과 동시에 부여된 이념 대립의 극복을 통한 통합 국가 건설의 과제를 가로막은 것이었다. 물론 전국의 인민위원회는 건준과 동일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1945년 말부터 1946년 사이에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미군정은 인민위원회를 공산계열의 조직으로 규정하고, 10월 10일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에 이어 12월 12일 이후 해산 명령과 함께 이를 집행해 나아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남과 영광의 인민위 조직과 해체 과정은 중앙과 동일하였다. 1945년 9월 20일에 개편된 전남인민위원회는 온건 민족계열조차 참여하지 않은 채 사회·공산계열들의 조직 구성을 보인다. 영광 역시 10월경에 건준이 인민위로 개편된 지역의 하나로서 행정과 치안을 수행하였다. 물론 영광의 경우 조희충이 그대로 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건준의 간부들이 유임되었으나 미군정이 11월 15일에 목포인민위 해체를 명령 집행하기 시작한 후 1946년 2월 19일에 영광경찰서를 접수한 후 2월 말경에 해체되었다. 당시 영광의 건준과 인민위를 이끌었던 대부분의 사회·공산계열 인사들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월북했거나 반정부투쟁에 가담하다가 죽어갔다.

광복 직후 미군정은 자유민주정치를 표방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어떠한 정치세력도 대다수 한국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소련은 초기에 행정권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 이양했으나 역시 북한에 그들의 이익에 우선하는 정부를 수립하려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동서냉전과 정치구도 속에서 통합국가 건설을 둘러싸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해체 등을 비롯한 민족 내부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형편에서 1945년 12월 모스크바 상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5년간의 신탁통치信託統治가 결정된다. 이에 김구·이승만 등의 민족계열은 비상국민회의非常國民會議를 결성하여 임정의 법통을 확인하고, 반공反共·반소적反蘇的 입장에서 반탁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비하여 공산계열은 민족전선을 결성하여 찬탁운동을 전개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상실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미군정과도 대립하였다. 역시 북한에서도 당시 국내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었던 조만식曹晩植(1883~1950)의 민족계열이 반탁운동을 전개하였으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위원에 제외되는 등 전격적으로 제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신탁통치안을 둘러싸고 비상국민회의와 민족전선, 남한과 북한이 대치하는 형세가 전개되었으며, 역시 영광에서도 대립과 마찰이 일어났다.

따라서 광복에서 대한민국 건국에 이르는 과정은 매우 험난하였다. 미군정은 지방의 민의를 파악하기 위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고문회를 구성하고, 전국적으로 인민위원회를 해체시켰다. 이러한 사정은 영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미군정은 1946년 3월 9일 김영하金永夏를 군수로 임명하여 영광의 행정조직을 재구성하였으며, 조선민족청년단朝鮮民族靑年團 등의 반공단체 지부가 속속 결성되어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공산계열은 지하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미군정기 정치상황은 매우 불안하였다. 미군정

은 한국에 대한 정치구상이 부재하여 총독부체제를 그대로 활용하여 친일세력이 청산될 수 없었다. 또한 식민지경제가 구축한 지주·소작 관계의 청산과 민주적 토지소유의 달성은 물론 민족경제의 부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었다. 그 결과 농지개혁의 경우, 전체 농지 63%가 소작지이자 50.2%가 소작농인 광복 직후의 상황에서 국·공유 재산과 일본인 소유 농지를 군정청에 이속시키고, 이를 1945년 11월에 설치한 신한공사에 귀속시켜 결과적으로 일본인과 친일세력의 재산접수는 물론 농민적 토지소유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더구나 미군정은 1945년 미국자유시장정책에 따른 쌀값 폭등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미국공출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농민들은 당시 시세보다 2~5배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강제로 공출하는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미군정의 정책 실패는 1946년 대구의 '10·1사건'을 시작으로 각지에서 미곡수집정책과 3 : 1 소작제에 반대하는 추수투쟁이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동시에 확산되었다. 결국 10월 말에는 전남에서 가장 규모가 큰 농민시위인 '추수봉기'가 일어나 11월까지 각지에서 전개되었다. 영광에서는 11월 3~4일에 영광읍과 흥농·군남면에서 일어나 경찰서와 지서를 습격하는 추수봉기가 전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의 발포로 13명이 사망하였다. 이러한 추수봉기는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 휴회된 후 미군정의 좌익배제와 남로당의 전술이 직접 충돌한 결과였으며, 이를 계기로 좌익세력은 빨치산투쟁을 전개하게 된다. 그러나 이 추수봉기는 당시 파탄에 직면한 농민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가 남로당의 전술에 따라 움직이는 좌익세력이 아니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미군정은 전국에서 경찰서 공격 등 추수봉기를 통한 농민과 노동자의 저항이 거세지자 1948년 3월에 중앙토지행정처설치령에 의해 신한공사 관리의 귀속농지에 대한 유상 분배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8월 15일까지 대상농지의 84%가 분배된 것이었으나 대한민국 수립 이후 농민이 부재한 농지개혁의 전례가 되고 말았다.

이처럼 광복공간의 이념간 대립 구도 속에서 1947년 7~8월 미소공동위원회의 최종 결렬을 계기로 좌익세력의 제거가 본격화되었으며, 단독정부수립론이 제기되는 단계로 진전된다. 결국 미국은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여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고, 미·소 양군이 철수하며, 이를 감시하기 위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파견이 결의되었다. 그러나 위원단은 소련과 북한의 거부로 북한에 파견되지 못하고, 유엔 소총회에서 가능한 지역내의 선거를 결정하였다. 이렇게 남한 단독선거로 굳어지자 영구적인 분단을 우려한 김구·김규식 등은 남북협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김구계열의 정치기반이 미약한 형편에서 평양의 연석회도도 공산주의자 중심으로 전개되고,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특히 광복공간에서의 국가 수립은 단순한 정파政派 사이의 통합이나 좌우합작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었다. 따라서 당시의 모든 정치세력은 일반 국민의 대중적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기반이 결여된 상황에서 제주도에서 '4·3사태'가 전개되었다. 이 사태는 당시 복합적인 정세 속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대규모 인명 피해가 초래된 비극이었으며, 정부는 2003년 10월 31일에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와 토벌대의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광복의 공간에서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한 안재홍·김규식과 여운형 등의 정치세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동서냉전과 첨예한 좌우익의 대립 속에서 어느 한 편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회색분자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기반조차 매우 취약한 형편 속에서 여운형·김구를 비롯한 한국현대사의 거목들이 피살되어 갔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공산계열 남로당은 남북협상파가 영구적인 남북분단을 우려하여 남한의 단독선거에 불참한 것과는 달리 좌익 인민공화국의 수립이라는 차원에서 단독선거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1948년에 전국적으로 이른바 '2·7, 5·10선거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다른 한편으로 한국전쟁 전후 빨치산의 전단계인 '구빨치산 야산대'의 무장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들 야산대는 영광에서도 불갑산을 근거지로 활동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좌경화된 인민위 간부와 좌경화된 추수봉기 주도자 등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48년 5월 10일에 유권자 75%가 참여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 이

승만계열의 한민당이 승리를 거둔 가운데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영광에서는 조영규가 당선되었다. 이어 제헌국회가 개회되어 헌법을 공포하고, 대통령제에 내각책임제를 절충한 정치체제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 대통령 이승만·부통령 이시영을 선출하고, 8월 15일에 대한민국의 수립을 내외에 선포하였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수립은 일제에 의해 침탈되었던 국권을 되찾아 주권국가를 계승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좌우합작의 민족계열조차 참여하지 않은 한계가 있었으며, 북한 역시 유엔 위원단의 입국을 막고 민족계열이 제거된 극좌적 상황에서 이루어져 남북분단 고착화를 심화시키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는 동서냉전의 기류가 주효하게 작용한 것이지만 민족 내부에서 민족국가 수립을 둘러싼 좌우익의 갈등 대립에 있었음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2. 제1공화국 이승만정권과 6.25전쟁

대한민국 건국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안정은 심화되었다. 이승만정권은 대한민국수립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출범 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친일세력의 정권기반화 속에서 1948년 제헌국회憲國會에서 설치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가 처음부터 거센 압력 저지에 부딪치게 되었다. 물론 전남특위에서도 일제 경찰출신 20여명을 구속 송치하고, 영광에서도 영광체육단사건을 일으켜 독립지사들을 고문 탄압한 고등계 형사가 구속되기도 했으나 결국 1949년 8월에 국회에서 반민특위 폐지안이 통과되어 와해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1948년 신한공사를 통한 재산 불하 이후 1950년 농지개혁법은 지가地價 보상의 부실과 농민층 배제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이는 냉전과 분단의 상황 속에서 반민족 친일세력과 식민지체제의 청산과 개혁이 부재하여 위기를 초래하고, 경제에 있어서도 거의 전반적인 파탄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 결과 이승만정권은 1950년 5월 30일에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남북협상파들의 진출이 신장되는 가운데 여당인 대한국민당이 참패를 당하여 정권 존립의 기반 자체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여기에 공산주의정권 수립을 목표로 한 좌익세력의 활동은 남한의 정치적 불안정을 가속화시켰다. 이들은 이미 1948년에 남한 단독정부수립 반대운동인 이른바 '2·7구국투쟁'과 5·10선거 반대투쟁을 전개한 후 남로당南勞黨의 전술전략에 따라 구빨치산으로 일컬어지는 야산대를 조직하여 빨치산 무장투쟁의 전초를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 '4·3사건'은 좌익의 개입이라는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이듬해까지 지속되었으며, 10월에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명령을 받은 여수의 14연대가 일으킨 '여순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사건은 제1공화국의 최대 사건으로 이후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대대적인 숙군肅軍을 단행하여 좌익계는 물론 광복군계열조차 제거되면서 극우적 반공국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1949년에는 남북한의 노동당이 공식적으로 합당하고, 남로당은 인민유격대를 조직하여 남한에서 본격적인 무력투쟁을 전개하는 상황으로 진전된다. 여순사건에 가담한 군인들이 지리산으로 후퇴하면서 광범위한 유격전구가 형성되었고, 이를 근거지로 조직적인 빨치산투쟁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영광은 전남 서남부지역에 해당하는 호남유격전구에 속했으며, 인민유격대로 전환된 이후에는 특정 연대에 소속되지 않고 14연대의 일부 군조직이 들어와 지휘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유격대는 불갑산과 구수산, 군유산을 중심으로 경찰 등을 습격하여 치안공백상태를 초래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유격투쟁은 1948년 말부터 1950년 초에 걸쳐 진행된 토벌작전에 따라 와해되어 갔으며, 영광의 유격대도 1949년 말에 태청산에서 거의 전멸하게 되었다. 물론 이들의 투쟁과 토벌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남한 정세는 북한이 전격 남침하여 해방시킬 수 있다는 오판을 하는데 영향을 주었으며, 북한은 1950년 6월 25일에 전격적으로 무력 남침을 감행하였다. 1953년 7월 23일에 휴전할 때까지 4년 여에 걸친 6·25전쟁은 평화적인 민족통합국가 건설을 완전히 차단하고, 남북 분단을 고착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물론 6·25전쟁은 그 관점에 따라 전통·수정주의적 기원설 등으로 서로 다른 견해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동서냉전東西冷戰에 의해 규정된 분단구조에서 비롯된 산물이자 일제강점기의 독립항쟁에 있어서 민족·공산 계열로의 분화가 광복 이후 자주민족국가의 건설 방

향에 그대로 반영되어 일어난 것이었다. 당시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사회민주주의체제를 수립해 나아가는 한편 민주기지노선에 입각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무력을 불사한 남한해방필요론을 제기하고 있었다. 더구나 1949년에는 중국이 공산화된 국제상황속에서 미국은 남한에 군사고문단만을 남기고 미군을 철수한 가운데 태평양지역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애치슨라인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대내외 정세 속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난 것이지만 유엔군의 파병 속에서 모택동의 중국도 참전하여 3·8선 부근에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소련은 유엔을 통해서 휴전을 제의하게 되었으며 그결과 1953년에 당시의 전선을 휴전선(休戰線)으로 하고, 포로의 자유송환을 내용으로 한 휴전이 성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국전쟁은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 이 전쟁으로 250여만명의 사망·실종자와 함께 국토의 모든 시설이 거의 파괴되었고, 1천만명에 달하는 이산가족(離散家族)을 낳았으며, 국민생활은 극도의 빈곤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전국에서 영광의 피해는 가장 컸다. 한국전쟁 기간 중 영광은 북한의 인민군 제6사단이 1950년 7월 23일에 진입한 후 남로당과 빨치산 등을 중심으로 조직된 조선노동당 영광위원회의 지배를 받았으며, 각 면리에도 생산유격대가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정치보위부가 주관하고, 인민위원회 등 하부조직이 가세한 가운데 반동분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처형하였다.

1952년 공보처가 발행한 『6.25사변피살자명부』에 기재된 총 59,964명의 피살자 중에서 전남지역은 43,511명이며, 여성은 15,956명 중에서 12,946명으로 나타난다. 더구나 영광은 전남지역의 49%에 해당하는 21,225명에 달했으며, 여성은 전국 여성의 50%인 7,914명이었다. 이는 전쟁기간 중에 행해진 매우 단편적인 통계이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25,000~35,000명으로 추산되는 영광의 인명피해는 전국에서 가장 극심한 경향을 띠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피해는 영광의 마을이 대부분 동족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나타내지만 9월 말부터 극좌 유격대가 등장하여 전쟁이 아닌 학살을 행한데 큰 요인이 있었다. 이는 공식 기록인 피해자 21,225명 중에서 20세와 10세 미만이 각각 38·16%를 차지하는 것처럼 군경·우익인사와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데 있었다. 이러한 피해는 각 읍면별로 본론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특히 좌익세력은 6·25 전쟁 기간 중인 1950~51년에 전남도당 유격사령부와 526군부대를 설치하고 각 지역의 빨치산활동을 전개하는 각 지구당을 두었다. 영광 불갑산에는 제5지구당이 설치되어 서해안의 섬들과 영산강 서부 지역을 대부분 관할하고 있었다. 이에 1950년 10월 2일에 육군 제11사단이 창설되어 각 시기별로 공비토벌작전인 ‘대보름작전’이 전개되었으며, 영광은 전남지구전투사령부 불갑산토벌부대가 투입되었다.

그 결과 영광의 산지에서 2천여명이 넘는 빨치산들이 사살되고 1951년 3월 11일에 마지막 근거지인 백수 갯봉이 완전 토벌되었다.

이처럼 한국전쟁은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 속에서 민족의 통일이 평화와 생명의 존귀함 속에서 이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현실적으로 동족 사이에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적대감을 형성하는 등 민족 내부의 갈등과 분단 고착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한국전쟁이 끝난지 60여년이 지난 21세기 문화시대의 길목에서 이에 대한 냉정한 통찰이 더욱 요구된다. 대한민국은 1990년대부터 자유민주화를 이룩하면서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 아직도 독재체제가 강화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편에 있다.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숭고한 자유민주주의가 재조명되는 가운데 광복에서 한국전쟁에 이르는 기간에 걸쳐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생명과 인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영광도 한국현대사의 질곡에서 예외일 수 없었던 것이지만 광복의 공간에서 어느 편에서 섰던지 이제 이념을 뛰어넘은 치유와 극복, 승화의 역사로 재구성하는 일은 현재를 살아가는 조현대인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